

-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2. 11.



박 왕 규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박왕규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중복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의 개인 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이 중복된 제13조를 삭제하고, 당초의 제14조와 제15조를 각각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로 하였습니다.
-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비밀 준수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2047
----------	----------

발의일자: 2022. 11. 04.

발 의 자: 박왕규, 장호섭, 박종길,
박정환, 정순옥, 황국주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2)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 3)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와 제15조를 각각 제13조와 제14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7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u>예산을 지원하는 경우</u> 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u>따른다</u> .	② ----- ----- <u>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u> ----- ----- <u>따라 지원할 수 있다</u> .
제13조(사업의 보조)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u>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u> .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생략	제13조(협력체계 구축) <u>현행과 같음</u>
제15조(교육·홍보) 생략	제14조(교육·홍보) <u>현행과 같음</u>
<신 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u>아니 된다</u> .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제32조의6제3항·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